

이덕일의 '역사의 창'



공자와 다산의 정치관

공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실패했지만 사후에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다. 천하를 주유하면서 자신을 써 달라고 했지만 어느 군주도 공자를 쓰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공자는 모든 제후국들이 주(周) 왕실을 섬기면 평화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는데, 공자를 만난 군주들은 자국의 패권강화에 관심이 있었지 주 왕실의 제후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다.

이처럼 현실에서 실패한 공자가 사후에 성인(聖人)으로 추대된 이유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공자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통용되는 진리였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복종합니까?" 공자가 답했다.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굽은 사람들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만,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모든 곧은 사람들을 버리면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습니다."('논어' 위정)

다산 정약용은 '원(原)이란 제목의 글을 썼는데, 원(原)은 원리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 중 하나가 '원정(原政)으로서, 정치의 원리를 생각한다는 글이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왜 누구는 어리석은데도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악을 전파하고 있고, 왜 누구는 현명한데도 아랫자리에 굽혀 있어서 그 덕이 가려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봉당(朋黨)을 없애고 공도(公道)를 넓혀서 현명한 이를 진출시키고 불초한 자를 쫓아내서 바

로잡는 것이니 이것이 정치다."(정약용, '원정') 공자나 다산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같았다.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정치에 복종한다고 말했다. 공자의 굽은 사람이 다산의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현명한 사람은 아랫자리에 굽혀 있어야 하는냐고 묻는 것이다. 이런 굽은 정치에 대한 다산의 해결책은 당파적 시각을 없애고 공도를 넓혀서 현명한 이를 진출시키고 불초한 자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자나 다산의 권고는 잘 먹히지 않는다. 인사권자 자체가 당파적 시각에 사로잡혀서 당파적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답했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를 충실하게 갖추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자공이 "부득이 하나를 꼭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나?"라고 다시 묻자 공자는 "군대를 버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자공이 "또 나머지 둘 중에서 부득이 꼭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나?"라고 또다시 묻자 공자는 "양식을 버려야 한다. 자고로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논어' 안연)

백성이 복종하게 만드는 요체를 묻은 노나라 애공의 질문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로 답변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것인데, 그 방법은 곧은 자를 쓰고 굽은 자를 버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정약용은 '원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같은 우리 백성인데 왜 누구는 토지의 이익을 모두 차지해 부유하게 살고, 왜 누구는 토지의 혜택을 얻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토지를 개량하고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바로잡았으니 이것이 정(政)이다."(정약용, '원정')

2백여 년 전의 글인데 마치 지금의 현실을 질타하는 듯하다. 같은 백성인데 누구는 부동산 광풍에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누구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산은 또 "같은 우리 백성인데 왜 누구는 땅이 많아서 그 풍요로움이 남는 곡식을 버리는데, 누구는 이지라진 땅도 없어서 모자라는 곡식을 걱정만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역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질타하고 있는 듯하다.

다산은 자신의 정치관을 펼치기 위해서 정계 복귀를 꿈꿨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치가들이 화려한 말의 성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아우성이다.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특효용 구호에 불과했는지, 이상에 비해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었는지, 정확한 진단에서 정확한 처방이 나온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안과 의사는 라식 수술을 받지 않는다고?



김덕재 신세계안과 원장

불평은 듣지 못했다. 왜일까? 바로 수술의 목적과 본인의 기대가 잘 맞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수술해드린 본원의 두 원장님은 모두 수술 전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였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이분들은 일반인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리에서 맨눈으로 모니터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약간 과장된 예를 들어보자. 한여름 하얀 모래가 펼쳐진 남태평양 해변에서의 휴가. 아이들은 무릎 깊이의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고 있다. 나는 멋진 색안경을 끼고 선베드(sunbed)에 누워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슨 일이지?' 하고 나는 다급하게 안경을 찾지 시작한다. 다행히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안경이 있어서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가 물에 빠졌다. 아이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향해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려는데 도수 있는 수경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맞다 난 고도근시가 있어서 맨눈으로는 아이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가방에서 도수 있는 수경을 찾지 시작했다. 수경을 찾지마자 물가로 뛰었고 뛰면서 안경을 벗고 수경을 착용했다. 짧은 단지 몇 분간의 순간이었지만 아찔한 경험이었다.

실제로 본원 원장님 중 한 분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던 중 사이드미러를 보다 어지러워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고, 그 일이 있은 후 바로 라식 수술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 즉 맨눈으로

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시력을 얻었기에 수술 후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수술에 준 나에게 말하기가 불편해서 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수술 후 시력은 얼마동안 유지될까? 수술 받는 입장에서는 평생 아니면 적어도 노안을 느끼기 전까지 시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술 후 시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 시력 교정 수술은 수술 당시 굴절 이상(근시 및 난시)을 기준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다시 나빠질 수도 있는 수술을 하는 이유는 수술 후 일정 기간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며, 나빠지더라도 재교정(재수술)을 통해 시력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굴절 교정 수술(라식·라섹 및 렌즈 삽입술)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각막 상태나 수술 전 굴절 이상의 정도, 수술자의 경험, 레이저의 종류 등 모든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술을 받는 목적과 수술을 꼭 받고 싶어하는 본인의 의지가 아닐까 싶다.

100% 안전한 수술은 없다. 그러나 시력 교정 수술은 100%에 가까운 사람이 안경을 벗게 되는, 현재 시행되는 어떠한 수술들보다 안전하고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라 생각한다.

社說

지방 소멸 위기 외면하는 정부 정책 문제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인 '소멸 위험지수'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고용정보원이 지난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사·군·구 및 읍·면·동별 구 중 네 곳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소멸 고위험지역' (소멸 위험지수 0.2 미만)이거나 '소멸 위험 진입 단계' (소멸 위험지수 0.2~0.5 미만)로 분석됐다. 2020년 12월 기준 전남도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는 185만1549명(가구수 89만3152)으로 10년 전인 2010년 12월 기준 191만8485명(세대수 79만9520)에 비해 6만6900여 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역 인구 늘리기 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는 '인구가 미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정책이 다자녀 우대 항목을 신규 적용하고 경북도와 함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 확대와 특별법 제정 등 전남도의 건의에도 이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충청권으로의 국가 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확장, 현재 인구·경제 규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책 수립, 여기에 공급 위주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 등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5개의 '지방 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지방의 소멸은 지방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교사 성비 불균형' 대책 없나

올해 광주·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사 합격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초등교사 남녀 성비 불균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마땅치 않아 교육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엿그제 발표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6명 가운데 남성은 딱 두 명(4.3%)뿐이었다. 전남의 경우도 전체 396명 중 남성은 106명으로 26.8%에 머물렀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대학 졸업생과 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으로 배 이상 많은 데다 필기시험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용고사에서 여성들의 강세 현상은 학교 현장의 남녀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자료

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전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 8300명 가운데 여성이 61.5%(5107명)를 차지했다. 광주의 경우 6036명 가운데 80.3%(4847명)가 여성이었다. 지난 2010년 광주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78.5%였으니 10년 사이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처럼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성 인식은 물론 학생 지도와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남교사 할당제'나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도입 등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교사의 전문성을 성별로 평가할 수 없고, 시험 성적으로 결정되는 교사 임용에 남녀 비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결국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부터 남성 지원자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세기 들어 유럽에서는 위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이 속속 설치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전되고, 관련 법률이 정비돼 가는 과정에서 특히 빛을 발했다. 전문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대부분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그렇지 못했다. 모든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하고, 위원들의 심의 시 발언이나 의견 역시 알 수 없게 했다. 위원 중에는 업체 관계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마치 '홍장'을 하듯 높이를 조금 낮추거나 녹지공간을 약간 늘리는 식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광주는 아파트로 덮인 잿밭 도시가 되고 말았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전제로 아파트가 그 수명을 다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며, 건설업체 등의 수익 제고나 투

도시계획위원회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공영위원회 등은 좀 다르다. 민간사업자나 자치구 등이 제시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변경 등의 가부를 심의한다. 그래서 그 권한도 막강하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면적이 큰 구역의 개발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큰 수익을 바라는 민간사업자, 단기간의 개발로 성과를 내려는 행정기관 등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원들은 도시 미래를 조망하는 전문가적 관점과 시민 전체의 이익을 감안하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전제로 아파트가 그 수명을 다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며, 건설업체 등의 수익 제고나 투

기 수단만이 아닌 도시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업체와 관련된 위원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 건축이나 토목만이 아닌 의료·과학·경제 등의 각계 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기고

공정 선거 실현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



정창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계장

'K-voting'의 세계화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에 맞는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제21대 총선을 코로나19의 확산 중에도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치러낸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난민기구(UHCHR) 등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대응 선거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세계 330여 곳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수한 선거 관리 경험과 노하우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 대해 일부 단체에서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해 명살을 겪은 바 있다. 앞서 미 대선 혼란을 선불리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선관위는 다가오는 4·7 재·보궐 선거와 내년엔 실시하는 제20대 대선, 제8회 동시 지방 선거에서 보다 강화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모든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관의 사전 회송용 봉투의 안전한 우체국 인계 상차 마련, 개표소 투표지 통제를 위한 관리 직원 배치, 투표지 보관 상자 이물질 투입 우려 원천 봉쇄를 위한 손잡이 구멍 제거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선거 관리 절차 사무 규정을 강화하고 공개를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의혹이나 시비도 없이 국민과 공감하는 화합의 선거를 만들고자 하는 위원회의 강력

한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최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자신의 홍보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자막 또는 수어 통역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자유롭게 질서 있는 선거운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국민들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사불귀정'이라 했던가? 이번 미국 대선에 전례 없는 혼란은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정상화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200년간 숙성된 시민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난해 제21대 총선과 같이 또다시 코로나 환경에서 4·7 재·보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내년 양대 선거 준비가 한창이다. 직원들의 가슴속에는 오직 단 한 건의 선거 부정 의혹도 없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선거 관리를 기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보여준 코로나를 극복한 우리 국민의 자력, 미국의 시민의식을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선진 의식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0-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